

‘총탄 자국 복원 논란’ 옛 도청 해법 나올까

5월단체 오늘 문체부 장관 면담...원형 복원 후 보존 요구키로 시민군 상황실·방송실도...문화전당 ‘복원 불가’속 만남 주목

옛 전남도청 5·18 시민군 항쟁지 복원을 요구해온 5·18단체가 13일 서울에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기로 하면서 옛 도청 복원에 관한 해법이 나올지 주목된다.

광주 금남로에 자리한 옛 도청 본관은 5·18 당시 시민군이 거점으로 삼은 항쟁지로, 5월단체를 비롯한 광주시민사회단체는 원형 복원후 보존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측은 도청 본관 건물은 경찰청 본관, 민원실 등 6개 건물과 함께 문화전당의 한 축인 민수평화교류원을 구성하는 건물로, 이미 공사가 완료된 만큼 다시 복원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5월단체는 지난 2년간의 줄기찬 요구에도 문화전당 측이 꺾여들지 않자 장관 면담을 추진해왔다.

5·18기념재단은 13일 오후 2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5·18단체가 만나 옛 전남도청 복원 문제를 논의한다고 12일 밝혔다. 5월단체는 이 자리에서 “옛 전남도청 본관은 5·18 당시 시민군의 상황실, 방송실로 사용된 공간으로 건물 곳곳에 계엄군의 총탄 흔적을 품고 있다. 문화전당 공사로 당시 시민군의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더라도 반드시 원형을 복원해 후손에 남겨야 한다”는 입장을 김 장관에게 전달하고 원형 복원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날 면담에는 5월 단체 측은 차명석 5·18재단 이사장, 김양래 재단 상임이사, 정춘식 5·18민주유공자 유족회장 등 3개 단체장(유족회·부상자회·구속자회)이, 문체부 측은 김 장관, 방신규 국립아시아문

화전당장 직무대리 등이 참석한다. 5월 단체는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문화전당 측에 옛 전남도청 본관에 남은 시민군 항쟁 흔적을 보존하라고 요구했다. 옛 전남도청 본관은 5·18의 가장 상징적인 공간이기 때문이다.

5월 단체의 요구사항은 크게 두가지다. 본관 1층 시민군 상황실, 방송실과 도청 곳곳에 남아 있을 계엄군의 총탄 흔적 복원이다. 1980년 5월 5·18시민군들은 옛 전남도청 1층 서무과 사무실 거점에 상황실과 방송실을 마련해 항쟁의 거점으로 삼았다. 항쟁이 수습된 이후 다시 도청으로 사용됐다가 문화전당 건립으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는 등 원형이 훼손됐지만, 5월 단체 측은 증언을 토대로 옛 모습을 재현해 시민들에게 보여주자는 것이다.

총탄 흔적의 경우 항쟁 수습 이후 수차례 공사를 거듭하면서 흔적이 상당부분 사라졌지만, 페인트칠 등 마감재를 걷어낸 후 면밀한 복원을 추진한다면 불가능한

작업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5월 단체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문화전당 측은 “건물 외벽과 내부 공간에 대한 리모델링 작업을 마친 상태에서 사실상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놔 양측 주장은 평행선을 달렸다.

김 장관 역시 지난 3월부터 5월 단체가 요구해온 면담을 거부해오다가 갑작스럽게 수용의사를 밝히면서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옛 전남도청 본관은 80년 5월 시민군들의 항쟁의 흔적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건물로 반드시 그 원형을 복원해 보존해야 한다는 광주시민 사회의 입장을 장관에게 전달할 예정”이라며 “문화전당을 책임진 장관에게 5월 단체의 반대에도 전당 공사가 강행되면서 원형이 훼손된 책임을 묻고 복원에 대한 입장을 내놓으라고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교수 2명 성희롱 발언 논란 대학측 진상 조사 나서

광주의 한 대학교 교수 2명이 성희롱 발언을 해 대학 측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12일 광주 A대학에 따르면 소속 교수 2명이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이 일면서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B교수는 지난 4월 수학여행을 가서 한 여학생이 답다고 하자 “더우면 옷을 벗어라. 나도 벗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는 또 취업해서 술을 따르라고 하면 “오빠 오빠하고 술을 따라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C교수는 과 모임에 가서 여장을 한 남학생을 보고 “나는 가슴이 큰 여자가 좋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해당 의혹을 받은 교수에 대해 수업 배제 조치를 내리는 한편,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를 벌인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지난 10일 검찰로 송치된 신안 여교사 성폭행 피의자 3명이 호송차에 오르기 전에 목포경찰서를 나오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여친 살해 시신 유기 10대 광주지법, 징역 10년 선고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하천에 유기한 10대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영환)는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김모(18)군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범행을 도운 친구 양모(18)군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꿈도 펼치지 못하고 죽었다. 살해 방법도 잔인하고 비정후 상당기간 시신이 방치됐다”면서 “미성년자이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군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자수를 권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양은 고개를 만나러 간다며 집을 나선 뒤 휴대전화가 꺼진 채 귀가하지 않았고 하루가 지나 하천 인근 갈대밭에서 얼골 곳곳에 멍이 든 모습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피의자들 ‘빨리 나오라’며 범행 도중 대화했다”

피해자 진술...공모 근거 확보 ‘여교사 성폭행’ 3명 검찰 송치 검, 공모·조력 밝히기 집중

삼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차례로 성폭행한 학부형과 주민 3명이 ‘강간 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범행 도중 “빨리 나오라”는 내용의 대화를 들었다는 피해자 진술을 확보, 사전 공모 근거를 한층 뒷받침했다.

목포경찰청은 12일 서로 공모해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 치상)로 학부모 박모(49)씨와 이모(34)씨, 주민 김모(38)씨를 구속 기소 의견으로 지난 10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오후 11시부터 이른 날 오전 1시30분 사이 신안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이 학교 여교사를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박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혼자 저녁식사를 하던 여교사에게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차량으로 관사에 데려다 준 뒤 차례로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경찰에서 “관사에 데려다 주고 신체를 만지긴 했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박씨의 체모가 발견된 점으로 미뤄 성폭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의 체내에선 김씨와 이씨의 DNA가 검출됐다.

경찰은 이날 송치 과정에서 사전 공모의 유력한 증거를 발표했다. 경찰은 관사에서 범행이 이뤄지는 동안 “빨리 나오라”는 피의자들간 대화 내용을 들었다는 피해자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차량 이동경로가 찍힌 CCTV와 통화내용 등도 이들의 범행이 사전 공모됐다는 근거가 되고 있다. 피의자 차량 3대가 범행 추정 시간에 10여 분간 관사 근처에 동시

에 머무른 것으로 미뤄 사전 공모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전 공모 정황에 따라 경찰은 당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유사강간과 준강간 혐의로 구속했다가 더 무거운 혐의인 강간 등 상해·치상죄로 변경, 적용했다.

이들은 이날 호송차에 타기 직전 경찰서 현관에서 “심경이 어떠냐, 범행 사실 인정하느냐, 공모하진 않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약속이라도 한 듯 모두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모든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오”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피해 여교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묻자 “미안하게 생각하고, 죄송스럽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들이 검찰에 송치됨에 따라 경찰은 피의자들의 사전 공모와 조력 행위, 범행의 의도성 여부 등을 명확하게 밝혀내는 수사사력을 모을 것으로 전망된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함평군의회 부의장 부인 영농법인에郡, 7년간 보조금 9억 지급 특혜 시비

함평군이 군의회 부의장의 부인이 운영하는 영농조합법인에 수년간 9억여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특히 해당 부의장은 지방자치법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한데다, 직무 관련 상임위원을 맡지 못하게 한 지방의원 윤리강령조차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함평군과 군의회 등에 따르면 군은 군의회 이모 부회장의 부인 임모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L영농법인에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간 보조금 9억592만원을 지급했다.

이 사업은 축산 조사로 제조 및 운송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국비 30%-지방비 60%를 지원하고 자부담이 10%다. L영농법인은 2009년 1억1469만원, 2010년 1억4278만원, 2011년 1억3206만원, 2012년 1억5172만원, 2013년 9707만원, 2014년 1억5950만원, 지난해 1억807만원 등을 지원받았다.

문제는 이 부의장이 L영농법인의 이사로써 실질 관리인이라는 것이다. 2008년 법인 설립 당시 대표이사를 맡았던

이 부의장은 2009년 대표이사에서 물러났고, 부인인 임씨가 현재까지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이 부의장은 법인 이사로 등재돼 있어, 그동안 지급된 보조금의 적절성 시비가 일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의원은 영리 목적 법인의 관리인이나 대표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고, 지방의원 윤리강령에는 소관 상임위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함평군 관계자는 “2009년부터 서류상 사용이 없는 해당 영농법인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부의장이 겸직금지 규정을 어기고 아직도 이사를 맡고 있어 농식품부에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해 보조금 지급이 부적절했다면 그간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 회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부의장은 “영농법인 이사가 겸직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알지 못했다”며 “조만간 이사를 직을 그만두겠다”고 해명했다.

/함평=황은화기자 hwang@

5·18재단, 지만원·뉴스타운에 손해 청구키로

왜곡 표현물 100여건 수집

5·18기념재단은 5·18관련 왜곡사실을 신문과 인터넷 언론에 올린 지만원씨와 인터넷 언론 뉴스타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5·18재단은 지난해 9월 25일 법원의 배포금지 가처분결정이 인용된 이후 최근까지 지사와 뉴스타운이 인쇄물과 인터넷을 통해 5·18을 왜곡한 표현물 100여점을 수집했으며, 변호사 협의를 거쳐 조만간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앞서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2일 지씨가 신청한 가처분 이의 신청(배포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을 기각하면서 지사와 뉴스타운 측에 5·18을 왜곡하는 표현물을 배포할 경우 5·18기념재단 등 6명의 소송 당사자에게 1회당 200만원씩 지급하라는 결정을 거듭 확인했었다. 5·18재단 관계자는 “형사소송 제기와 별도로, 지사와 뉴스타운 측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함으로써 5·18왜곡세력의 움직임에 한 풀 꺾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서 활선공법 전선 교체 근로자 또 감전

한전 폐지 발표 이틀만에

한국전력이 직접 활선공법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지 이틀 만에 노후전선 교체에 나섰던 근로자가 고압전선에 감전돼 서울로 긴급 후송됐다.

12일 오전 10시48분께 광주시 북구 각화동 홈플러스 부근에서 전봇대에 올라 전선 교체작업을 하던 근로자 이모(36)씨가 2인2900볼트가 흐르는 전선에 감전됐다. 이모는 화상을 입은 이체를 119구급대에 의해 조선타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서울 화상전문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씨의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전선을 교체하는 방식인 직접 활선공법으로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전은 지난 10일 현장 작업자의

감전사고가 잇따르고 이슈화 조짐을 보이자 지난 25년간 시행된 직접 활선공법을 폐지하겠다고 밝혔고, 노조 측은 “구체적 실행방안을 내놓으라”고 성명을 발표하며 반겼다.

하태준 건설노조 광주전남전기원자부장은 “한전은 직접 활선공법을 폐지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 실행 방안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며 “현장에서 여전히 위험한만한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구체적 계획 없는 한전의 발표는 공염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건설노조는 울타리 광주·전남에서만 직접 활선공법에 따른 감전으로 작업자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고 치료 중이라고 전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다른 남자에게 왜 친절해!”...데이트 폭력 일삼은 60대

“...사귀는 여성이 다른 남성에게 친절하게 말했다는 이유 등으로 데이트 폭력을 일삼은 60대 농부가 경찰서행.

○12일 나주경찰에 따르면 최모(61)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1년 가량 김모(여·57)씨와 만남을 거že오면서 때로는 흥기를 들이밀며 협박하는가

하며 주먹과 발로 때리는 등 5차례에 걸쳐 김씨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혐의.

○경찰에 불참한 최씨는 “식당에서 친절하게 구는 김씨가 자꾸 다른 남자에게 친절하게 구는 걸 지켜봐 나서 그랬다”면서 “여자친구의 요구대로 휴대전화 번호도 지우려고 다시 연락하거나 일하는 곳에 나타나 귀찮게 굴지도 않았다”면서 때늦은 후회.

/나주=손영철기자 ycsn@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9개>

사건번호	물건번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액 [단위: 원]	비고
2015타경 16392	1	여수시 봉곡서1길38, 102동 11층 1110호 [아파트]		70,000,000	70,000,000	
2015타경 17088	1	광양시 태안길1, 102동 2층 201호 [태안동 아파트]		22,000,000	22,000,000	
2015타경 51156	1	순천시 비봉길70, 102동 8층 802호 [조례동, 동아아파트] 84.68㎡		110,000,000	110,000,000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2016타경 421	1	여수시 중앙동 229 155㎡ [양이항지분전부] [여수시 중앙동 17 45,59㎡ 18,45㎡ [양미항지분전부] 100㎡ [양미항지분전부] 4,29㎡	대	9,515,470	9,515,470	임괄매각, 제시외 단독주택
2016타경 902	2	순천시 비봉면 송기리 220-5 331㎡ 순천시 비봉면 송산길 64 80,19㎡ [제외외원불포함]	대	9,309,280	9,309,280	임괄매각, 이남부지분/13전부, 공유자우선매수권제한
2016타경 1080	1	순천시 행룡면 신성리 397 504㎡ 순천시 행룡면 정재길323 93,45㎡ [제외외원불포함] 69㎡, 유실수 목련 등 1식	대	85,783,000	85,783,000	임괄매각, 제시외 건물, 유실수 및 조경포함

사건번호	물건번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액 [단위: 원]	비고
[대지/임야/전답]						
2015타경 15907	1	여수시 불계동 산141 3670㎡	임야	43,673,000	43,673,000	
2015타경 52234	1	순천시 금곡동 369 294평	전	8,550,400	8,550,4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수익표환
2016타경 902	1	순천시 비봉면 송기리 198 456㎡ [이남부지분13전의2전부]	대	19,837,730	19,837,730	임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요, 공유자우선매수권제한
2016타경 964	1	보성군 불교동 낙성리401-3 2421㎡ [임용전지분121/2421평부, 농지취득자격증명요]	대	16,954,000	16,954,000	행사제한
2016타경 1448	1	여수시 주상동 165-7 23㎡ [김복동지분2부]	대	2,840,500	2,840,500	행사제한, 공유자우선매수권
2016타경 50226	1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385-14 1929㎡	대	562,460,400	562,460,400	임괄매각
		독소 1385-14 198,24㎡	사무실	562,460,400	562,460,400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재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독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거래소인, 임괄매각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해당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② 공약자의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제40조) 행사에 따른 매수신청과 매수보증금의 입금요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공약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에서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④ 매각물건의 위치: 2016. 7. 4. [월] 16:00
 ⑤ 매각장소: 광주지방법원 순천시지법 경매법원
 5. 매각방법
 ① 임괄매각에 임의지 기입신청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 등을 기재하고 남양외 보증금용 합계 입찰보증금 및 입찰비용을 첨부한다. 매수신청은 매각물건의 1할(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발행의 자기인도표 또는 현금 등 액외거나 지급보증위탁계좌를 개설한 통장(월보통예금)을 준비하여야 한다.
 ② 2인 이상의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서류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③ 입찰서류의 투입이 완료되면 관공로 개표를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항을 최고거래소인(당연)으로 공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서류의 평균으로 추가입찰을 실시한다.
 ④ 최고거래소인(당연)을 최고거래소인(당연)으로 하는 다른 매수신청인도, 매수신청보증금을 입찰할지가 불확실한 즉시 반환한다.

2016. 6.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법보좌관 이민우